

5년 내 자율항해선박 개발 목표… 규제완화·세제지원 나서

선박·드론 AI 선도 프로젝트

부총리 “AI기반 선박·드론 혁신은 산업 ‘게임체인저’이자 필수전략”

드론분야 완전 자율비행기술 목표
6년 내 AI드론 5대 완성 프로젝트

배들도 자율주행차처럼 선장·선원의 기기 조작 없이 운항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1일 정부는 향후 5년 내 선원 탑승이 필요 없는 수준의 자율항해 기술개발을 목표로 내걸었다. 개발을 맡은 민간에는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경기 성남 HD현대 글로벌 R&D 센터에서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AI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 (선박·드론 분야)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AI 자율운항선박’과 ‘AI 드론’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글로벌 R&D 센터를 방문, 자율운항선박 기술시연 설명을 듣고 있다. /기재부

구 부총리는 “AI 기반 선박·드론 혁신은 기존 산업 생태계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며 “선원 없는 선박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는 한편 세계 기업들이 AI 드론 개발에 앞다퉈 뛰어들며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산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

의 IT, 반도체, 조선산업 역량을 AI 기술과 결합함으로써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동원 가능한 역량을 결집해 조선·드론산업의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박분야의 경우, 민관이 협력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오는 2030년까지 선원이 탑승하지 않고도 항해하는 수준의 기

술력을 갖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올해 4분기에 조선·해운사와 AI 기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K-자율운항선박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자율항해·기관자동화·화물·항만 연계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대규모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국내 연안선박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진행해 자율운항선박 학습·개발을 위한 공공데이터셋을 확보·보급할 계획이다.

신기술 실증을 위한 선제적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연내에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지정하고 테스트베드(시험무대)를 확보한다. 자율운항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다. 특히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드론 분야 역시 완전 자율비행 기술 개발이 목표로, 2031년까지 AI 기반 드론 5대 완성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드론 활용도가 높은 항공, 소방, 농업, 물류, 건설·시설관리 등 5대 분야가 중점 개발 대상이다. 이들 분야에서 임무수행 AI 드론의 개발·실증·상용화

지원을 전주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5대 분야 완성체 개발과 함께 핵심 부품(자동 자세제어 모터 등), AI 범용 핵심기술(디지털 트윈 맵핑 등) 상용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국내 제조생태계 조성을 위한 드론 전용 제조 기반을 확충하고 드론 전용 비행 실증 구역 확대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드론 산업계 맞춤형 정책 발굴 등을 위해 민간 주도 협력체인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도 구성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또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유비파이, 니어스랩, 메이사, 항공안전기술원 등 관련 기업·연구기관도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AI 대전환 선도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확대, 과감한 규제개선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17개 시·도 참여 ‘자율주행 시대’ 실증 논의

국토부,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의견모아
택시·버스 등과 상생방안도 논의

정부가 제도화를 포함한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연내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경주에서 자율주행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개최했다. 지난달 1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와 ‘자율주행차 현장 토론회’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그간 자율주행기업, 운수업계 등 각계각층에서 수렴한 의견을 정책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협의체를 마련했다.

광역협의체는 국내 무인 자율주행 기술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규모 실증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비혼잡 시간에 노선 단위로 진행했던 소규모 실증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다양한 예외적 상황(Edge Case)



서울 중구 청계광장 인근에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버스가 시범운행되고 있다. /뉴시스

을 학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 중국 베이징 등과 같이 도시 단위로 제한 없이 대규모 실증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에 의견을 모았다.

100대 이상의 대규모 실증 시 택시, 버스 등 지역 운수업계와의 상생방안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끊임없는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 실증용 차량 플랫폼 제공 등 기업 지원방안 등도 논의했다. 실증도시 추진방안은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해외 자율주행차의 진출을 대비하기 위해 국내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 제도

화 및 육성방안도 논의했다.

기존의 택시, 버스 등 운수사업자 간의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차량의 운영부터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적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자율주행 차량 원격관제 등 모니터링, 차량 문제 발생 시 긴급출동 지원, 차량의 유지보수 지원 등 자율주행 차량에 특화된 서비스 산업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해외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더라도 해외 기술이나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도록 국내 서비스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데이터, 사이버보안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포함한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이르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임월시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산업 발전은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기술수용성 제고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일상 속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으로 자율주행 기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모든 개인연체자, 신복위 ‘채무조정’ 가능

» 1면 ‘7년 이상, 5000만원…’서 계속

정부는 형평성을 위해 7년 이상의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 방안도 마련한다.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개인연체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복위 주관하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체기간 5년 이상의 채무는 새도약기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

으며, 5년 이하의 채무는 신복위 채무조정과 유사한 20~70%의 원금 감면 및 분할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4일부터다.

이덕원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크게 확대됐고 민생회복 지연으로 부담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덜어주는 제도를 넘어 장기간 빛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



이덕원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소상공인연합회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공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 없는 4.5일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가운데)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소공연

소공연, 주 4.5일제 반대 100만 서명운동

“정부, 주휴수당 폐지 먼저해야
과도·불합리 인건비 구조에
주 4.5일제 도입은 ‘사형선고’”

소상공인업체가 주 4.5일제를 반대하며 100만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정부가 주휴수당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배수진을 치면서다.

특히 정부가 주 4.5일제를 강행하기위해선 무엇보다 주휴수당을 먼저 폐지해야 한다는 게 소상공인업체계의 입장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 4.5일제가 도입되고 주휴수당까지 유지될 경우 영세 소상공인들은 이중 부담에 시달리게 된다”면서 “현재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인건비 부담 구조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 4.5일제가 도입될 경우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예고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송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재론의 여기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지난 1999년 9월(98헌마310)

과 2019년 4월(2016헌마466) 결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각각 판단한 바 있다.

소공연은 기자회견문에서 “5인 미만 근로기준법이 소상공인 업종에 강행된다면 휴일근로, 야간근로는 현재보다도 1.5배를 더 지급해야 하며 휴일 야간근로의 경우 2배를 더 줘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면서 “게다가 주 52시간 적용 대상이 돼 근로자에게 임금을 더 주더라도 일을 더 시킬래야 시킬 수 없는 형편이 된다”고 꼬집었다.

서울 관악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유덕현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4.5일제가 도입되더라도 주휴수당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방침 철회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4.5일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혁신’이 아니라 ‘폐업 통보’와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서울 이태원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경민 대표는 “PC방 업계의 현실은 더욱 참혹하다. 수년째 시간당 1000원대에서 동결돼 있는데 임대료와 최저임금은 50% 이상 올랐다. 인터넷 전용선 비용만 월 100만원이 넘고, 고가의 PC설비 투자까지 감당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주휴수당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문 닫으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